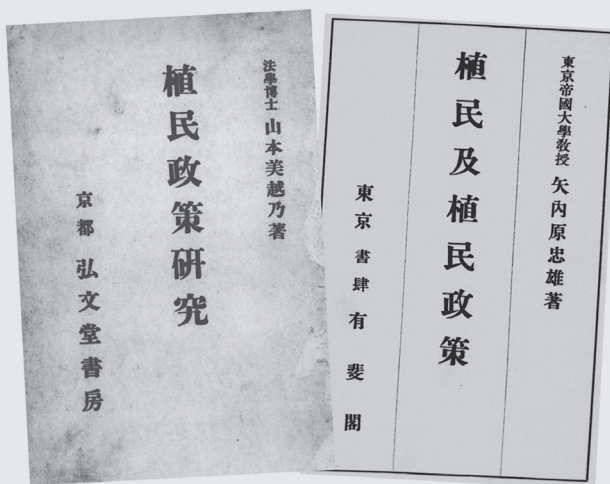


2/ 1920년대 일본 식민정책학의 식민정책론

식민지 본위주의와 자치주의*

박양신



1920년대 식민정책학의 대표적 텍스트

박양신(朴羊信)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홋카이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일본근대사 전공으로, 사상사, 대외 인식 등을 주된 연구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민정책학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저서로 『陸羯南: 政治認識と對外論』, 공저로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2, 3이 있고, 논문으로 「식민정책학의 신지평과 만주문제 인식」, 「‘대동아공영권’의 건설과 식민정책학」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https://doi.org/10.29154/ILBI.2019.21.042>

1. 머리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사조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를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민본주의의 철저화’와 ‘국제적 평등주의의 확립’으로 요약했다.¹ 이 중 후자를 ‘국제민주주의’로 표현하기도 한 요시노는 그런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낸 계기로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권이 제시한 3원칙 — 비병합주의, 무배상주의, 민족자결주의 — 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한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원칙을 들었다.² 이 전쟁 수습과 정에서 제시된 민족자결주의는 식민지의 독립 욕구를 자극하여,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서도 독립을 요구하는 3.1운동이 발생했다.

3.1운동은 일본의 식민정책을 되돌아보게 하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 식민지민의 ‘민족적 자각’은 식민지 통치의 담당자나 식민정책학자가 상당히 경계하는 바였다. 타이완총독부 고위 관료였던 두 인물 모치지 로쿠사부로(持地六三郎)와 도고 미노루(東郷實)는 타이완의 식민정책사를 정리하는 가운데, 1910년대 중반 이후 펼쳐질 타이완 통치 제3기의 식민정책은 ‘대인(對人)정책’ 즉 이민족정책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³ 도고에 따르면 식민지민은 식민지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 진보, 교육 발달에 힘입어 ‘민족적 자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인정책’이 중요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대표적인 식민정책학자인 교토제국대학의 야마모토 미오노(山本美越乃)는 식민지의 ‘민족적 자각’은 “인류의 자연스러운 본능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자각이 독립 요구로 향하지 않도록 식민지의 교육은 “식민지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교육”, 즉 실업교육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⁴ 이렇듯 일찍부터 경계했던 식민지민의 ‘민족적 자각’이 바로 3.1운동이라는 민족적 저항으로 현실화했던 것이다.

1 吉野作造, 「世界の大主潮と其順応策及び対応策」(『中央公論』 1919. 1.), 『吉野作造選集』 6, 岩波書店, 1996, 15쪽.

2 吉野作造, 「帝國主義より國際民主主義へ」(『六合雜誌』 1919. 7.), 『吉野作造選集』 6, 54쪽, 60쪽.

3 持地六三郎, 『臺灣殖民政策』, 富山房, 1912, 14쪽; 東郷實, 『臺灣農業殖民論』, 富山房, 1914, 13쪽.

4 山本美越乃, 「民族的自覺と植民地土民の教育」, 『經濟論叢』 2-2(1916. 2.), 205쪽.

식자들은 일본의 조선 통치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다. 이는 식민지를 연구하는 식민정책학자들에게도 민감한 문제였다. 일본 정부는 3.1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이른바 ‘문화정치’로의 전환을 꾀했지만, 식민지의 ‘민족적 자각’이 식민지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제국 체제를 흔들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던 식민정책학자들은 식민지의 입장에 선 통치를 해야 하며, 식민지 통치방침을 동화주의에서 자치주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17년까지 와세다대학에서 식민정책 강좌를 담당했던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정책과 과거의 그것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식민지 통치가 식민지 자신을 위해서 행해지는가, 아니면 식민국을 위해서 행해지는가”에서 찾고, 향후 식민지 민족과의 공존공영의 방법을 세우는 것이 식민정책의 근본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 이런 견해는 당시 식민정책학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던 공통된 인식이었다. 또한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식민지에 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그들은 일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나모치 이치로(金持一郎)는, 청일전쟁 이후의 ‘번역의 시대’를 거쳐 러일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일본의 식민정책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로소 ‘완성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고 식민정책학을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이 ‘완성의 시대’, 적어도 1920년대까지 식민정책학계에는 자유주의와 비판주의의 두 조류가 존재했다. 가나모치는 그 자유주의가 국가주의에 자신을 조화시켰다는 의미에서 당시의 식민정책학을 “가장 온건한 국가주의 정책학”이었다고 평가했지만,⁶ 그럼에도 이 시기의 식민정책학이 그 이전이나 이후의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시점을 유지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글은 바로 그 1920년대 일본 식민정책학에서 보였던 식민정책론에 대해 식민지 본위주의의 관점과 자치주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5 永井柳太郎, 「植民思想の革命期」, 『中央公論』 38-1, 1923, 118쪽.

6 金持一郎, 「我國に於ける植民政策學の發達」, 『經濟論叢』 38-1, 1934, 439쪽.

자 한다. 종래 식민정책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식민정책학자 개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⁷ 이 글은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이 시기 식민정책학의 식민정책론을 고찰함에 있어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우선 식민정책학의 텍스트들을 분석하여 식민의 의의와 식민지 통치방식에 관한 원론의 내용에서 1920년대의 그것이 그 이전과 어떻게 다른가를 밝힌다. 이어서 그 원론에서 보이는 특징이 일본의 식민지, 즉 조선과 타이완에 대한 식민정책론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주요 식민정책학자인 야마모토 미오노, 이즈미 아키라(泉哲),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2. 식민의 의의와 식민지 통치방식

1) 식민지 영유의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일본에서 식민정책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러일전쟁 이후이다. 도쿄제국대학, 교토제국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에서의 식민정책 강좌 개설과 그에 대응하는 식민정책학자의 출현, 교과서적인 저작의 출판이 이 시기를 특징짓는 지표가 된다.⁸

러일전쟁 이후에 등장한 초기 식민정책학 텍스트들은 식민지 획득의 의의와 관련하여 그것이 식민국에 경제적 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7 예컨대 아사다 교지(浅田喬二)의 일련의 연구(『日本植民地研究史論』, 未来社, 1990에 新渡戸稲造, 泉哲, 矢内原忠雄, 細川嘉六의 식민론이 실려 있으며, 이 외에 『山本美越乃の植民論(上・下)』, 『駒沢大学経済学論集』 18-1·2, 18-3, 1986이 있다), 야나이하라 다다오에 대한 다수의 연구(이에 대해서는 岡崎滋樹, 「矢内原忠雄研究の系譜」, 『社会システム研究』 24, 2012를 참조)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이 글과 관련해서는 小野——一郎, 「第一次大戦後の植民政策論」, 小野——一郎·吉信肅 編, 『兩大戰間期のアジアと日本』, 大月書店, 1979 참고.

8 金子文夫, 「日本における植民地研究の成立事情」, 小島麗逸 編, 『日本帝国主義と東アジア』, アジア経済研究所, 1979, 68쪽. 이 밖에도 도쿄고등상업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고등상업학교에도 식민정책 강좌가 개설되어갔다.

경향이 있었다. 당시 나가사키(長崎)고등상업학교 교수였던 아마노우치 마사아키(山内正暉)의 『식민론』(殖民論, 1905)에서는 식민의 의의로서 경제적 이익, 인구 증가의 해소, 자연에 대한 학술 연구, 열등인종에 대한 감정 회유로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효과 등을 들었다.⁹ 이 시기 텍스트의 표준적인 체제와 내용을 보이는 아마노우치 아키라(山内顯)의 『식민정책범론』(殖民政策汎論, 1908)에서는 식민의 목적이 경제적 이익과 팽창에 있다고 분명하게 강조한다.

식민국이 큰 희생을 바쳐 식민사업에 관여하는 주된 목적은 식민국이 다대(多大)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부수적인 부산물이며, … 식민적 활동의 목적은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식민국의 팽창에 있으며, 식민국이 모든 어려움을 마다않고 식민사업의 경영에 임하는 것은 세계 인류의 번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¹⁰

이 저자는 서양의 식민국이 내세우는 “문명 전파사업”, 소위 문명화 논리는 식민적 활동에 따른 부수적 결과일 뿐, 사실은 “정략상의 언질”이자 “식민적 활동의 적법,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교활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배척했다.¹¹

이와 비슷한 입장은 이나다 슈노스케(稲田周之助)의 『식민정책』(殖民政策, 1912)에서도 보인다. 이나다는 “식민 경영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본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식민지의 토지, 자원, 동식물 및 토민(土民)을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독일 식민장관의 말을 빌려 식민의 의의를 내세웠다.¹² 소위 문명화 논리라는 것은 그것이 직접 식민의 목적이 되는 경우는 드물며, 그 배후에 다른 목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¹³

9 山内正暉, 『식민론』, 金刺芳流堂, 1905, 124~129쪽.

10 山内顯, 『식민정책汎論』, 博文館, 1908, 119~120쪽.

11 山内顯, 『식민정책汎論』, 52~53쪽.

12 稲田周之助, 『식민정책』, 有斐閣, 1912, 12쪽.

13 稲田周之助, 『식민정책』, 11쪽.

도쿄제국대학에서 식민정책을 강의했던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의 1916~17년도 강의록을 보면, 식민의 이익에 대해 과잉 인구의 해소, 자본과 생산물의 해외 확장, 종교 전파 등 10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다음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즉 식민국들은 “민족정신(내셔널리티)” 사상으로 식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인류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예상치 않은 결과로서 “전 지구의 인간화”가 초래된다고.¹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텍스트에서는 식민의 목적과 의의를 식민지를 획득한 식민국에 실현될 이익, 특히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식민 활동의 대외 명분으로서의 ‘문명화 사명’에 대해서조차 그 본질은 위선임을 폭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1920년대의 텍스트들은 이와 조금 다른 변화를 보인다. 위에서 서술한 전통적인 식민정책학에서 이야기하는 식민의 의의가 서술되면서도 그에 머물지 않고, 식민지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모국 본위’가 아닌 ‘식민지 본위’의 관점이 강조된다.

교토제국대학 교수 야마모토 미오노는 1927년까지 11판을 거듭한 『식민정책연구』(植民政策研究, 1920)에서 식민지 영유의 목적에 대해,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경제적 이익의 획득 또는 증진이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¹⁵ 이는 지금까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허나 야마모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모국 및 식민지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¹⁶시키는 것이 식민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이 식민 ‘모국’뿐만 아니라 ‘식민지’에도 미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 경제적 이익을 설명하는 가운데 식민지에 대해서 ‘모국 본위주의’도 ‘식민지 본위주의’도 아닌 “모국과 식민지의 상호이익(相互享益)주의”를 기초로 한 통상주의의 확립을 주장했다.¹⁷ 이는 종전의 식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던

14 矢内原忠雄, 『新渡戸博士植民政策講義及び論文集』, 『新渡戸稻造全集』 第4巻, 教文館, 1969, 48쪽.

15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研究』, 弘文堂書房, 1920, 121쪽.

16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研究』, 122쪽.

17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研究』, 151쪽.

입장에서 식민국과 식민지 양자의 상호 이익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주장이다.

아마모토가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사조의 흐름이 영향을 주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민족자결주의라는 새로운 이상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편, “민족중주의 사상”의 세력이 각 방면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앞으로의 식민지 통치책은 과거와 같이 “모국 본위주의나 전제적인 동화주의에 오래도록 입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¹⁸

이와 같이 식민국이 아닌 식민지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은 1920년대 식민정책학에서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를 잡는다. 메이지(明治)대학 교수 이즈미 아키라(泉哲)는 『식민지통치론』(植民地統治論, 1921)의 서문에서 현재 일본에는 경제 본위의 식민론 아니면 본국 본위의 식민론을 전개하는 저서가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식민지 본위’의 식민지 통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식민지 통치의 근본 방침이 식민지 본위여야 한다는 것은 문명 식민국이 인정해야 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만이 식민국 본위의 정책을 계속할 경우, 문명국으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식민국의 의무를 다할 수 없게 되어 마침내 과거의 많은 실패의 역사를 또 반복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경계했다.¹⁹

식민지 본위로 식민정책의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이즈미는 강하게 설파했다. 이즈미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영유의 목적은 변화했기 때문에 식민의 동기와 획득 시의 목적이 곧바로 통치방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종래 식민지 영유의 목적으로 거론된 것들은 “불행히도 모두 본국 측에서 본 목적이며, 민족의 자주권 즉 한 민족이 자치의 능력을 키우면 자주(自主)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관념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비판한다.²⁰ 식민지 영유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였다는

18 山本美越乃, 『植民地問題私見』, 弘文堂書房, 1921, 14쪽.

19 泉哲, 『植民地統治論』, 有斐閣書房, 1921, 1~2쪽.

20 泉哲, 『植民地統治論』, 107쪽.

이유로 여전히 식민국 본위를 주장하는 자가 있지만, 이는 전쟁 이전의 사상의 타성일 뿐, 이제는 “식민지 영유는 문명의 신성한 위탁”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본국의 창고를 채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²¹

문명의 신성한 위탁에 배치되지 않는 통치방침은 식민지 본위의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환언하면 식민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유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인을 위해 통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기타의 법제는 모두 식민지인의 행복과 발달을 조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명국이 미개 혹은 반개(半開)의 영토에 대한 통치의 임무를 맡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영예이자 중대한 임무로서, 식민지인의 행복을 증진하고 문화적 발달을 조장하는 것이 식민지 통치의 대방침이어야 한다. 이 목적만 달성하면 다른 하등의 얻는 바가 없어도 문명국인 식민국의 임무를 다하고 문명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²²

이처럼 이즈미는 식민지 통치의 목적을 식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서 “식민지인의 행복과 발달” 증진으로 이동시켜 그것을 “문명국인 식민국의 임무”로까지 승화시켰다.²³ 종전에 식민지 획득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교활한 수단”으로까지 폄하되던 문명화 논리를 정면에 내세우고 그에 따른 식민정책의 실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을 다른 학자에서 좀 더 살펴보면,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학 마쓰오카 마사오(松岡正男)의 『식민정책』(1924)에서는 식민의 목적과 관련하여, 국가의 행위에는 윤리적 근거가 필요한데 식민운동의 윤리적 근거는 바

21 泉哲, 『植民地統治論』, 108쪽.

22 泉哲, 『植民地統治論』, 108~109쪽.

23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은 용어의 변화도 수반한다. 당시 식민지민을 지칭할 때 흔히 ‘토인’(土人), ‘토민’(土民)이라는 용어가 쓰였으나, 이즈미는 ‘식민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야마모토 미오노는 초기에는 ‘토민’을 쓰다가 점차 식민지 ‘주민’ 내지 ‘원주민’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있으며, 야나이하라 다다오는 ‘원주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리하여 1920년대에 가면 ‘토민’, ‘토인’이라는 용어는 서서히 사어(死語)화해간다.

로 “문명의 신장”에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이익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타국의 영토를 병합하거나 할양받는 것은 과거의 일이며, 현재는 이러한 윤리적 기초 위에 “식민지 주민의 행복과 문화의 진보”를 통치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²⁴ 이즈미의 뒤를 이어 메이지대학에서 식민정책 강좌를 담당한 고지마 겐(小島憲)의 『식민정책』(1927)도 식민 활동의 목적을 “모국과 식민지의 공존공영”의 결실을 거두는 것에 있다면서 이를 “모국·식민지 양(兩)본위주의”라고 칭했다.²⁵ 도쿄제국대학 교수 야나이하라 다다오는 『식민 및 식민정책』(植民及植民政策, 1926)의 서문에서 식민 및 식민정책의 의의, 식민국 대 식민지, 식민자 대 원주자에 대한 영향, 식민적 사회관계의 특색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내세워,²⁶ 시점을 통치 주체로서의 식민국에 두는 것이 아니라 통치 대상인 식민지, 식민지 사회와의 관계성에 둬으로써 아예 종래의 연구 시각을 확실하게 바꾸어버렸다. 종래에 경시되었던 식민지의 시점이 처음부터 연구 시야에 들어와버린 것이다. 식민정책학에서 그의 저서가 특별한 이유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식민지 영유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인식 변화는 식민지 통치방식에 대한 견해도 그대로 반영된다. 바로 ‘자치주의’를 식민지 통치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2) 식민지 통치방식에 대하여

1920년대 식민정책학의 텍스트에서 보이는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식민지 통치에 ‘자치주의’(혹은 ‘자주주의’)의 방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한 점이다. 대비되는 두 통치방식인 ‘동화주의’와 ‘자치주의’에 대한 견해에 주의하면서 텍스트를 검토하기로 한다.

1920년대 이전의 텍스트들에서는 식민지 통치방식과 관련한 서술이 통일성 없이 다소 혼란한 모습을 보인다. 우선 야마노우치 마사아키의 『식민

24 松岡正男, 『植民政策』, 時事新報社, 1924, 29쪽.

25 小島憲, 『植民政策』, 章華社, 1927, 13쪽.

26 矢内原忠雄, 『植民及植民政策』(1926), 『矢内原忠雄全集』第1卷, 岩波書店, 1963, 5쪽.

론』(1905)에서는 영국을 사례로 삼아 본국이 식민지에서 직접 행정을 담당하는 ‘왕관식민지’와 자치제도로 운영되는 ‘자치식민지’의 둘로 구분한 뒤, 영국 이외의 나라는 대부분 왕관식민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²⁷ 이 분류에 따르면 동화주의 통치의 대표격인 프랑스도 단순히 ‘왕관식민지’로 구분된다. 이 저자는 “지방적 관습과 제도의 유린”이 왕관식민지의 최대 결점이라고 지적하고, 가장 효과적인 식민 통치방식은 ‘보호국제도’라고 주장했다.²⁸ 이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한 것을 옹호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해석된다. 자치식민지와 관련해서는 설명에 그치고, 딱히 자신의 의견을 내보이고 있지 않다.

야마노우치 아키라의 『식민정책범론』(1908)에서는 식민지를 보호국 및 피보호지, 직할식민지, 대의제 식민지, 자치식민지, 동화식민지의 다섯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저자는 이 유형들을 식민지의 발전 과정으로 파악한다. 즉 직할식민지에서 대의제가 가미된 식민지로, 그다음에 자치식민지로 이행되어 분리 독립하거나 동화식민지로 발전해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자치식민지에서 발전한 형태로 동화식민지를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 그는 자치식민지를 “식민지와 모국의 관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동화식민지에 대해 “식민적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모국의 팽창에 있으므로 식민적 활동의 성공은 식민지의 동화로 끝나는 것이 지당하다. 왜냐하면 식민지가 완전히 모국에 동화되어 정치, 경제, 기타 제반에서 모국의 한 행정구획과 동일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모국이 팽창한 경우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²⁹ 이는 통상 식민정책학에서 이해하는 ‘동화주의’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어쨌든 야마노우치는 동화주의를 식민 통치의 궁극적 형태로서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나다 슈노스케의 『식민정책』(1912)에서는 식민지 통치방식을 ‘합일주

27 山内正暲, 『殖民論』, 제10장, 제11장.

28 山内正暲, 『殖民論』, 262쪽, 266쪽.

29 山内顯, 『殖民政策汎論』, 236쪽, 241쪽.

의'와 '방임주의'로 구분하고, 전자의 대표국으로 프랑스, 후자의 대표국으로 영국을 들어 설명했다.³⁰ 위에서 말한 직할식민지 내지 동화식민지를 '합일주의'로, 자치식민지를 '방임주의'로 표현한 것인데, 각각의 장단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든가의 평가는 내리고 있지 않다.

한편 니토베 이나조는 식민지 통치방법을 영주정치, 특허회사로의 통치권 위임, 국가직영제도, 자치식민지로 분류했다. 여기서 니토베는 국가직영제도의 범주에 드는 프랑스의 '동화주의'의 폐해가 심하다는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식민지 통치는 정부의 직할이 가장 좋다"는 인식을 보인다.³¹ 반면, 자치식민지에 대해서는 영국 외에는 사례가 없으며, "자치는 앵글로색슨의 민족적 특징"이라고 규정한다.³² 이는 자치식민지가 보편성을 갖는 통치방식이라는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니토베 역시 이 시기의 여느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치주의를 일본이 취해야 할 이상적인 방침으로는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나가이 류타로의 『식민원론』(植民原論, 1916)은 식민지 통치제도를 직할제도, 자치제도, 동화제도, 위임통치제도의 넷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나가이는 자치제도에 대해 그것이 영국 식민지에 한정된 형태임을 지적한 뒤, 자치제도는 입헌정치의 발달에 따른 당연한 산물이라면서 식민지민의 이해(利害)와 관련된 문제를 식민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³³ 또한 동화제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소개하면서도, 본국에서의 통치제도가 전제적인가 민주적인가에 따라 동화제도가 식민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모국의 통치제도가 전제적이라면 동화제도는 전제적이 되겠지만, 민주적이라면 동화제도도 민주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여 자치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화제도는 일률적으로 항상 유해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³⁴

30 稲田周之助, 『殖民政策』, 제3장.

31 矢内原忠雄, 『新渡戸博士植民政策講義及び論文集』, 115쪽.

32 矢内原忠雄, 『新渡戸博士植民政策講義及び論文集』, 117쪽.

33 永井柳太郎, 『植民原論』, 巖松堂書店, 1916, 213쪽.

34 永井柳太郎, 『植民原論』, 222쪽.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이전의 텍스트들에서는 식민지 통치방식과 관련해서 유형 분류의 방법도 제각각이고, 동화주의와 자치주의에 대한 평가에서도 반드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그 이후와 비교하면, 동화주의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가나 자치주의를 영국 식민지에 한정된 제도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향해야 할 이상으로 는 보지 않는 경향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1920년대에 들면 입을 모아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자치주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대표적 논자인 야마모토 미오노의 『식민정책연구』(1920)에서는 ‘식민지 통치에 관한 주의’로 동화주의와 자치주의를 들고 자세히 논하고 있다. 우선 ‘동화주의’(policy of assimilation)란 식민지를 본국의 한 지방처럼 취급하여 그 내정에 가능한 한 모국과 동일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식민지의 입법·사법·행정 등 제반 정부에 모국과의 ‘획일주의’를 실행하여 통일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주의를 취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프랑스가 있다. 반면 ‘자치주의’(policy of selfgovernment)란 모국과 식민지는 서로 상황이 다르고 각자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모국은 함부로 식민지에 간섭하지 않고 가능한 한 식민지로 하여금 그 내정을 처리하게 한다는 방침에 따라, 모국은 단지 식민지의 감독권을 총괄하는 데 불과한 것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다.³⁵ 야마모토는 이 두 가지 주의 중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자치주의에 찬성을 표했다.

그에 따르면 동화주의는 “인류 이성의 공통성”이라는 사상적 전제하에 성립한 것이다. 즉 인간은 공통되게 이성이라는 것을 지니므로 적어도 합리적인 기초를 갖는 제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류 사회의 향상,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종의 합리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근래의 과학 연구는 이 합리설이 실제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반론한다. 인간은 이성에 지배되기보다는 본능, 습관, 환경, 전래의 신념에 의해 좌우되는 바가 크며, 이런 경향

35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研究』, 156쪽.

은 문화의 정도가 낮고 이성적 비판력이 결여된 야만, 미개의 인종 사이에서 특히 더 심하다고 했다. 하지만 본래 이런 야만 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식민정책이 “인류 이성의 공통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화주의는 적절치 못하며, 이 점이 식민지 통치에서 동화주의가 실패한 중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각자의 습관과 신념을 움직여 동화의 내실을 거둘 만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통치 방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말했다.³⁶

반면, 자치주의에 대해 아마모토는 적극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은 식민정책에 신기원을 갖는 기운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민족자결주의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래 매우 위험시되던 자치식민지와 모국의 관계가 의외로 공고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식민지 통치의 근본방침으로서 “프랑스류의 동화주의(오히려 동치주의라고 하는 편이 적당할 듯함-원문)보다 영국류의 자치주의가 성공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³⁷ 이런 세계사적 흐름에 따라 일본도 모름지기 자치주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각 민족은 각기 민족적 특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정도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통치의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라면 급진적으로 모국의 제도를 이식하여 동화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식민지 통치의 비결은 각 민족의 본능, 습관, 유전적 신념 등을 연구하여 그들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파괴하거나 그 평화적 발달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와 조화할 수 있는 문명적 제도를 서서히 이입(移入)하여 그들의 사회생활을 점차 개선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식민지 통치의 근본 방침은 동화주의보다는 오히려 자치주의에 비중을 두고, 모국은 식민지 토민(土民)의 개인적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서서히 사

36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研究』, 159~160쪽.

37 山本美越乃, 『植民地問題私見』, 6쪽.

회 상태를 개선토록 하여 점차 고등한 문화적 생활의 진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아야 한다.³⁸ (강조-인용자)

이와 같이 아마모토는 자치주의를 식민통치의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주장이 식민지민의 권리를 존중해서라기보다는 식민국과 식민지 사이에는 문명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급작스럽게 문명국의 표준을 적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토민에게 문명의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은 마치 어른의 옷을 아이에게 입히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불합리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³⁹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 선 그로서는 당연히 해도 극단적인 자치주의, 즉 독립 분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식민지 영유의 목적은 식민지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으므로 식민지의 독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만드는 식의 통치 방법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주의도 적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⁴⁰ 그는 “자치통치는 식민지 통치의 최종 이상(理想)이지만, 그 시행에는 식민지 주민의 일반 문화의 진보, 특히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재정적 독립·자급이 선행 요건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⁴¹

한편, ‘식민지 본위’의 통치를 주장했던 이즈미 아키라의 『식민지통치론』(1921)에서도 ‘식민지 통치의 원칙’으로 ‘동화주의’와 ‘비동화주의’의 두 가지를 제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비동화주의’는 아마모토가 제시한 ‘자치주의’와 그 함의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그는 ‘동화주의’는 무의식적으로 채용된 방침으로, 세계의 식민국은 반드시 한 번은 이 주의에 의거해 식민지의 통치를 기도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비동화주의’는 자각에 의한 통

38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研究』, 164쪽.

39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研究』, 166쪽.

40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研究』, 167~168쪽.

41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研究』, 254쪽.

치 방침으로, 식민지 영유의 여러 경험에 의해 민족심리를 이해한 결과 등장한 것이며, 참된 식민지 통치방침은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했다.⁴² 이즈미는 프랑스가 알제리에 적용한 동화주의의 실패를 지적한 뒤, 일본도 그간 동화정책을 취해왔지만 이는 식민지민의 반항심을 유발했을 뿐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동화주의를 비판했다.

야만인에 대해 동화주의를 채용할 때는 그 종족의 멸망을 초래하고, 문화가 진보된 민족에 대해 이 주의를 채용할 때는 식민국인에 대한 반항심을 고양시게 되니, 동화주의의 최대 결점은 한 종족이 수백 대(代)에 걸쳐 건설한 문화를 배제하고, 새로운 계통에 속하는 문화의 채용을 강제하는 점에 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문화는 결코 단시일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타민족의 풍속, 습관, 문학을 급속히 채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만일 이를 실현했다고 하면 그것은 외형의 모방에 불과하고 정신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⁴³

반면 ‘비동화주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식민지 본위’의 통치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비동화주의’는 식민지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도로 식민지의 발달을 꾀하고, 본국의 국고에서 보조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본국으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는 결국 행정의 방침이 본국 본위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⁴⁴ 결국 이즈미는 식민지를 본국과 분리하여 ‘식민지 본위’로 정책을 운용하는 ‘비동화주의’가 바람직한 통치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자치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은 야나이하라 다다오도 마찬가지였다. 야나이하라는 『식민 및 식민정책』(1926)에서 ‘식민정책의 방침’으로 종속주의(L'Assujettissement), 동화주의(L'Assimilation), 자주주의(L'Autonomie)의 세 가지를 들었다. 종속주의는 본국의 이익만을 위해

42 泉哲, 『植民地統治論』, 279쪽.

43 泉哲, 『植民地統治論』, 282쪽.

44 泉哲, 『植民地統治論』, 287~288쪽.

서 전제적으로 식민지를 통치하는 과거의 방식이고, 동화주의는 “식민지는 본국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식민지를 본국과 동일하게 대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동화주의는 ‘사회군’이 특수한 존재라는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불량하며, 원주자의 사회생활을 압박함으로써 불만과 반항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

반면 식민지에 자치를 허용하는 ‘자주주의’(자치주의)는 영국에서 그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종래의 캐나다, 호주에 이어 아일랜드에도 도미니온(자치식민지)이 인정되었고, 인도에도 자치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소식민지에도 ‘자주주의’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주주의’ 방침이 이제 대세를 이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자주주의’는 “식민지의 특이성을 존중하고 그 자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식민지에 대한 본국의 영유 지배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실제에서는 오히려 “본국과 식민지 간 연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제국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⁴⁵

앞서 1910년대에 식민의 목적으로 식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던 이나타 슈노스케도 이 시기에 이르면 다소 입장이 변화한다. 식민지민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착취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일상생활, 풍속, 관습, 언어, 종교 등은 가능한 한 그대로 인정하고 압박과 강제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동화주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치와 자영(自營)”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식민지민의 자치 요구를 무시하면 더 큰 문제, 즉 독립론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⁴⁶

고지마 겐의 『식민정책』(1927)에서도 ‘식민지 통치에 관한 주의’와 관련해서 ‘동화주의와 비동화주의’, ‘전제주의와 자치주의’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동화주의와 비동화주의’는 식민지의 풍속, 습관, 제도 등을 존중하느

45 矢内原忠雄, 『植民及植民政策』, 247~250쪽.

46 稲田周之助, 『植民政策通解』, 巖松堂, 1924, 132~137쪽.

나 마느냐를 기준으로, ‘전제주의와 자치주의’는 식민 본국이 식민지의 내정에 관여하느냐 마느냐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고지마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한 논리로 동화주의를 비판하는 한편, ‘비동화주의’는 식민지의 습속과 제도를 존중하여 자연스럽게 그 발달을 꾀하는 것이라면서 발달된 식민지에는 자치제도를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⁴⁷

또한 ‘자치주의’에 대해서는 식민지가 발달해서 주민에게 자치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재정적 자립을 전제로 곧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 자치의 정도는 내정에 한정해야 하며, 군사·외교·관세제도 등은 모국에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다. 그는 나아가 식민지가 스스로 자신의 제반 사항을 완전히 처리할 실력을 갖춘 후에 희망한다면 독립을 허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때 타국과의 관계에서 필요하다면 독립한 식민지와 공수동맹을 맺든가 연방을 조직하든가의 수단을 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⁴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대 식민정책학에서는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자치주의를 이상적인 식민 통치의 방침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다. 심지어 자치주의의 궁극적인 종착점으로서 식민지의 분리 독립조차도 논리상으로는 용인되는 단계까지 나아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론적 논의에 기초해서 실제 일본 식민지에 대한 식민정책론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일본 식민지에 대한 식민정책론

앞에서 확인한 식민정책학에서의 식민지 분위주의와 자치주의의 주장은 조선과 타이완에 대한 구체적인 논책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어 나타난다. 다만

47 小島憲, 『植民政策』, 96쪽.

48 小島憲, 『植民政策』, 98쪽, 100쪽.

원칙적으로 같은 자치주의의 입장에 서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차가 있었다. 이 점에 주의하면서 그들의 식민정책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선

아마모토 미오노는 “다년간 쌓여온 조선 통치의 암운(暗雲)이 올해 3월 마침내 독립운동으로 천둥과 소나기를 동반한 불행을 보기에 이르고 나서야 조야(朝野)의 관심은 눈에 띄게 식민지 통치문제로 집중되게 되었다”며 3.1운동이 일본 사회의 관심을 식민지 통치문제로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⁴⁹ 그는 조선처럼 과거에 고유의 문화를 지니고 다년간 독립적으로 발달해온 국민은 도저히 동화가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는 자치주의로 통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자치주의를 실현할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조선 통치의 이상은 영국의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와의 관계처럼 ‘자치식민지’로 만들어 일본과의 관계를 원만히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장래 조선인의 지식이 진보함에 따라 대의제도를 인정하여 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정부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교육을 통해 조선인의 지식 수준이 대의제도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질 때까지는 그 중간적인 제도로 행정각 부에 선거로 선출된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평의회’ 제도를 부설하는 것이 급무라고 주장했다.⁵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먼저 중추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마모토는 현재 따로 규정이 없는 중추원의 자문사항에 대해 법령으로 그 범위를 확정하고, 구성 의원을 현재 전원 관선(官選)인 것을 바꾸어 민간의 식자

49 山本美越乃, 「朝鮮統治の根本問題」, 『經濟論叢』 9-3, 1919, 85쪽.

50 山本美越乃, 「朝鮮統治の根本問題」, 87~88쪽.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다수의 민선(民選)의원과 소수의 관선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 행정단위인 도, 부, 군 등에도 현재의 유명무실한 자문기관인 참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그 지방의 식자 중에서 호선하는 다수의 민선의원과 소수의 관선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행정평의회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 지방행정평의회는 면(面) 단위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⁵¹

이와 같은 견해를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치의 훈련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민족적 자각심’이 발달함에 따라 식민지 본국과 갈등을 빚어 우려할 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모국의 이익을 해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내정은 조선인의 자치에 맡기고 모국은 단지 주권을 장악할 뿐인 자치영토로서, 공존공보(共存共保)의 목적 아래 양 국민의 영구적인 제휴 친선을 획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⁵²

이렇듯 야마모토가 조선의 자치를 강조하고 있었다면, 입법상의 자치, 즉 의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제44회 제국의회(1920. 12. 27.~1921. 3. 26.)에는 식민지의 참정권과 관련된 두 가지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하나는 타이완인에 의한 ‘타이완의회설치청원’이고,⁵³ 다른 하나는 조선인에 의한 ‘중의원 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할 건’이었다.⁵⁴ 두 식민지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즉 한쪽은 타이완 자체의 의회를 설립하는, 다른

51 山本美越乃, 「朝鮮統治の根本問題」, 88~89쪽. 실제로 조선에서는 1920년 7월 지방관제 개정으로 기존의 참사제도가 폐지되고, 도에 도평의회, 부와 면에 각각 협의회가 설치되었다.

52 山本美越乃, 「朝鮮統治の根本問題」, 91쪽.

53 주로 도쿄의 타이완 유학생을 주축으로 결성된 ‘신민회’가 중심이 되어 실행한 것으로, 이후 1921년 10월 타이완에서 결성된 타이완문화협회가 중심이 되어 1934년까지 매년 계속해서 제국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실현을 보지 못했다. 타이완의회설치청원운동에 대해서는 浅田喬二, 「1920年代台湾における抗日民族運動の展開過程: 「台湾文化協會」の活動を中心にして」, 『歴史学研究』 414, 1974; 若林正丈, 『台湾抗日運動史研究』, 研文出版, 1983 참조.

54 민원식을 회장으로 하는 국민협회는 1920년 제42회 제국의회에 처음 이 청원서를 제출한 이래 참정권청원운동을 전개했다. 청원서는 제43회, 제44회 제국의회에 연이어 제출되었는데, 제44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뒤 민원식이 조선 유학생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청원은 중의원에서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경인문화사, 2006, 제2부 제1장 참조.

쪽은 조선의 대표를 일본 제국의회에 참가시키는 방향으로 참정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청원서가 제출되었던 것이다. 유형적으로 분류하자면 전자는 자치주의에, 후자는 동화주의에 상응하는 참정의 방식이다.

바로 이 두 청원 건에 대한 논평에서 야마모토는 지금 당장 조선인과 타이완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금은 그 준비 단계로서 교육의 보급 및 지식의 향상을 꾀하는 한편, 지방에 자치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의 소(小)정무에 이들을 참여하게 하여 훈련을 시켜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⁵⁵ 다만 참정의 방법으로서 타이완의회 설치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평했다.⁵⁶ 자치주의 주장자로서는 당연한 평가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당초 식민지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했던 야마모토는 다음 절에서 보듯이 그 후 타이완의회설치운동에는 지지로 입장을 바꾼 반면, 조선의 의회 설치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선은 아직 의회를 설립할 만한 자격, 즉 ‘재정적 자급력’과 ‘정치적 자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정적 자급의 문제는 타이완이 1905년 이후 재정 자급을 달성한 반면, 조선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적 자각’과 관련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제국의회에 타이완의회 설치를 요구한 타이완과 비교하면, 조선에서의 참정권을 둘러싼 주장과 운동은 대체로 “감정적, 피상적, 지리멸렬”하며 통일적 근거가 없어 널리 식자의 동정을 끌 만한 저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년간의 악정에 시달려 정치적 자각심을 소모한 것에서 찾았다.⁵⁷

이처럼 3.1운동 이후 야마모토는 조선에 자치주의의 방침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가 생각한 자치의 정도는 자신이 이상으로 삼은 ‘자치식민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낮은 수준이었다. 즉 중추원과 각급 지방

55 山本美越乃, 『植民地問題私見』, 202쪽, 204쪽.

56 山本美越乃, 『植民地問題私見』, 207쪽.

57 山本美越乃, 『異民族の統一糾合と其自覺的運動の調和』, 『外交時報』 49-1, 1929, 84~85쪽.

단체의 행정평의회 의원의 일부를 민선의원으로 선출한다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한편, 이즈미 아키라도 조선에 대한 동화정책은 철저히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1,500만에 4,000년의 특수 문화를 가진 민족을 동화시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신 ‘조선 본위’의 관점에서 조선의 구제도와 문물을 존중하고 조선인의 희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조선인이 바라는 것은 조선인 스스로가 조선을 통치하는 일이며, “내부 주권의 획득”이 그들의 최소한의 희망이라고 보았다.⁵⁸ 그런데 조선인이 과연 내부 주권의 획득으로 만족할지는 의문이라고 하면서도 그는 조선의 장래에 대해 “우선 조선에 완전한 자치제도를 실시하고, 그 운용을 숙지할 즈음에는 보호제도하의 일부주권국으로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에 맞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⁵⁹ 이는 조선의 자치식민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같은 책에서 식민지 발달의 귀착점은 자치식민지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하고 있다.

이즈미는 1927년 4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교수로 부임한다. 부임 후 조선에 대한 정책을 논한 글에서도 동화정책은 무리라고 비판하고 조선에 자치를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3.1운동 이후의 문화정치도 여전히 ‘일본 본위’의 정치임을 지적하고, ‘조선 본위’의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책으로서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본인보다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은 어른과 아이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참된 공평은 조선인을 일본인 이상으로 보호 유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관청, 회사, 학교 등의 중요한 지위의 반을 조선인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

58 泉哲, 『植民地統治論』, 375쪽.

59 泉哲, 『植民地統治論』, 376쪽.

장했다.⁶⁰

다음으로 정치와 관련해서는 중앙의 중추원과 지방의 자문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중추원의 결함으로 의원 임명제를 따르는 자문기관이라는 점과 전부 조선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중추원을 임명이 아닌 선출 의원으로 조직하고, 여기에는 재류 일본인의 여론도 살피기 위해 일본인도 포함해야 하며, 자문기관을 의결기관으로 바꾸어 장차 자치제로 가는 데 필요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⁶¹ 지방의 도평의회, 부협의회, 면협의회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의 개혁을 주문했다. 현재 임명제인 도평의회 의원을 인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조직하고, 자문적 심의기관인 도평의회를 의결기관으로 바꾸어 도의 예산은 물론 지방 규칙의 제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협의회는 현행 25세 이상의 남자, 부세(府稅) 5엔 이상 납부자라는 선거권 자격을 21세 이상과 부세 3엔 이상으로 각기 낮추고, 현재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훨씬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반반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나아가 부윤도 임명이 아닌 민선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면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종래 지정 면은 선거, 일반 면은 임명으로 구성되던 것을 모두 법정 유자격자의 선거에 의한 협의회로 만들고,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²

이처럼 이즈미는 중앙의 중추원과 각급 지방단체 협의회 구성을 임명이 아닌 선출 의원으로 하고, 그 성격도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바꾸어 적극적인 정치 참가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교육과 관련해서 조선인의 초등교육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 조선인의 중등교육 기관을 증설하고 각종 실업학교를 충분히 보급하여 실제 실업(實業)에 종사할 기술자를 양성할 것을 요구하고, 전문학교 등

60 泉哲, 「朝鮮を如何にすべきや (一)」, 『外交時報』 47-1, 1928, 14~15쪽.

61 泉哲, 「朝鮮を如何にすべきや (一)」, 17쪽. 여기서 장차 중추원을 의결기관으로 바꾼다면 1원제 또는 2원제 입법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중앙의 의회 개설을 암시하는 듯한 서술을 하고는 있으나, 명시적으로 조선의회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62 泉哲, 「朝鮮を如何にすべきや (一)」, 20~22쪽.

의 고등교육 기관을 조선인에게 더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⁶³

이상의 논문 내용을 문제 삼아 조선총독부는 경성제대 측에 이즈미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한다.⁶⁴ 경성제대 총장의 거부로 해임되는 일은 없었으나, 이즈미의 논책이 총독부의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이었음을 엿보게 한다.

한편, 앞서 본 야마모토가 조선의회의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야나이하라는 조선에 ‘자주주의’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조선의회를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야나이하라는, 그간의 문화적 교육으로 조선인들은 정치적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지방단체의 자문기관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것 외에는 참정권이 없으며, 또한 교육은 장려되어도 학교 졸업생에게 사회적 활동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불안과 절망이 조선 사회의 저류에 쌓여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선인이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어떤 형태로든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조선의 정치적 불안을 제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⁶⁵

야나이하라는 조선에 대의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인의 정치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해, 언제가 되면 조선인의 정치능력이 성숙했다고 판단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조선인은 정치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조선에 가보라. 길가의 돌들이 모두 자유를 외친다. 돌은 아무리 외쳐도 경찰에게 단속되지 않으니까.”라고 맞받아쳤다. 요컨대 조선 인민의 참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이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⁶⁶ 그는 동화주의에 의거해 일본 의회로 대의기관을 일원화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조선인의 정치 참여는 조선의회의 설립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에 자치를 부여했을 때 조선의 분리 독립을 우려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조선은 분리 독립하지 않겠지만, 가령 그들이 활력을 얻어 독립국가로서 설 실력을

63 泉哲, 「朝鮮を如何にすべきや (二)」, 『外交時報』 47-2, 1928, 129쪽, 132~133쪽.

64 정준영,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된 식민정책학자: 이즈미 아키라(泉哲)의 식민정책론과 〈국제공법강좌〉」, 『사회와 역사』 118, 2018, 138쪽.

65 矢内原忠雄, 『植民政策の新基調』(1927), 『矢内原忠雄全集』 第1卷, 729~730쪽.

66 矢内原忠雄, 『植民政策の新基調』, 739~740쪽.

함양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식민정책의 성공이자 일본국민의 명예”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조선의회의 개설은 조선 통치의 근본 방침이자 그 목표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⁶⁷

야나이하라가 거론한 또 다른 조선문제로 산미증식계획이 있다. 이를 논한 글에서 야나이하라는 이 계획에 대한 아마모토 미오노의 평가를 비판하고 있는데, 아마모토는 1925년에 재수립된 조선산미증식계획을 “모국과 식민지의 상호향익주의”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시책이라고 평가했다.⁶⁸ 아마모토는 이 계획이 조선에 부족한 식량의 공급은 물론 농민의 수입 증가를 초래하므로 조선 측에도 유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나 야나이하라는 이 계획이 과연 조선인에게도 이익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 계획이 조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액은 일본 국내의 1인당 쌀 소비액에 비해 약 절반에 불과하다. 그래서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잡곡의 증산을 꾀했으나,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최근에는 외국 미(米)와 만주의 조(粟)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조선에서 생산된 쌀이 일본으로 이출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서, 조선의 식량 수요 증가에 대한 해결은커녕 오히려 식량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⁶⁹ 그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조선인의 토지상실, 농민 이촌(離村), 경제적 무산자화의 원흉으로 비판받는 것과 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 이번의 계획이 조선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자본주의적 작용—예컨대 이 사업에서 토지개량사업의 반을 민간회사에게 맡기기로 한 계획에 따라 설립된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의 영리 활동 등—에 대해 정부가 감독하여 조선인 자신의 경제력을 함양시킬 적극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⁷⁰ 이즈미도 이 문제에서는 야나이하라와 같은 의견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은 완전히 일본 본위의 사업으로, 산출

67 矢内原忠雄, 『植民政策の新基調』, 743쪽.

68 山本美越乃, 「朝鮮産米増殖計画と世論」, 『經濟論叢』 22-1, 1926, 159쪽.

69 矢内原忠雄, 「朝鮮産米増殖計画に就て」(1926. 2.), 『矢内原忠雄全集』 第1巻, 703쪽.

70 矢内原忠雄, 「朝鮮産米増殖計画に就て」, 721~722쪽.

된 쌀은 전부 일본으로 수송되고 조선인의 식량미를 증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⁷¹

2) 타이완

타이완의 식민정책과 관련해서도 식민정책학자들은 자치주의와 식민지 본위의 정책을 주문하였다. 타이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이즈미 아키라였다. 이는 이즈미가 근무한 메이지대학에 타이완 유학생들이 많았으며, 특히 후술하는 타이완의회설치운동에 참가한 유학생들과 그가 직접 인연을 맺고 있었던 사실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⁷²

이즈미는 타이완에 대해 종래 채용했던 불철저한 동화주의를 포기하고 “비동화주의인 도민(島民)본위의 정책”을 확립해야 하며, 타이완 통치의 최종 귀착점은 ‘자치식민지’로 만드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⁷³ 그리고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실업(實業) 교육에 치우쳐 있는 경향을 수정하여 타이완에도 본국과 동일한 종류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⁴ 대개 식민정책학자들은 식민지의 교육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즈미의 이런 의견은 이례적이다. 이즈미는 인도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인도가 영국에 저항하게 된 것을 교육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오류이며, “식민국의 임무는 식민지의 안녕과 행복을 꾀하고 식민지인을 문화로 유도함에 있음을 깨닫고, 교육방침도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⁵

이즈미는 그 밖에도 타이완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당업과 관련해서 1명 이상의 일본인이 회사 설립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현 규정을 폐지하여 타이완인에게 기업(起業)의 기회를 더 개방하고, 공직에 취직할 기

71 泉哲, 「朝鮮を如何にすべきや (一)」, 5쪽.

72 若林正丈, 『台湾抗日運動史研究』, 96쪽.

73 泉哲, 「台湾統治策の根本的変革を促す」, 『太陽』 26-8, 1920, 112쪽.

74 泉哲, 「台湾統治策の根本的変革を促す」, 108쪽.

75 泉哲, 『植民地統治論』, 294~295쪽.

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언론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⁷⁶ 이 글은 과거 타이완총독부 관료였던 도고 미노루(東郷實)에게 비판받기도 했지만,⁷⁷ 그의 비판은 이즈미가 실정을 잘 모르고, 잘못된 통계 자료를 썼다는 등 주로 팩트에 집중되고 ‘비동화주의’, ‘식민지 본위’라는 이즈미의 식민정책 관점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⁷⁸

1920년 7월에 단행된 지방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로서의 불철저성을 비판했다. 이 지방제도 개혁에서는 우선 종래의 12청 중 2개 청을 제외한 10개 청을 5주(州)로 개편하고, 주 아래에 군(郡), 시(市), 가(街), 장(庄)을 두었으며, 군을 제외한 모든 행정단위에 공공단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일종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다. 또한 자치단체인 주, 시, 가, 장에는 협의회라는 자문기관을 설치했다.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해 이즈미는 두 가지 점에서 비판했다. 첫째, 각 자치단체의 장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주지사에 총독을 대리하는 의미에서 관리를 임명하는 것은 혹 합리적일지 모르나, 적어도 나머지 단위의 단체장은 선출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협의회가 단순한 자문기관이며 협의회 의원이 모두 임명직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이래서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의회 의원에 일본인을 임명하기라도 한다면 협의회 설치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⁷⁹

이즈미는 타이완의회설치청원운동에 대해서는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타이완은 이미 재정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달성했으나, 여기에 정치적 자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불평불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민지의 자치는 식민지 주민이 선거로 뽑은 의원들로 조직된 식민지 의회로 시작되어야 한다면 청원운동을 지지했다.⁸⁰ 그 제1회 청원 시에 덴 겐지로(田健治

76 泉哲, 「台湾統治策の根本的変革を促す」, 108~110쪽.

77 東郷実, 「植民政策の批判に就いて(泉哲の所論を駁す)」, 『太陽』 26-13, 1920.

78 도고 미노루도 식민정책으로서의 동화주의에는 시종 반대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양신, 「도고 미노루(東郷實)의 식민정책론: 농업식민론과 ‘비동화주의’」, 『역사교육』 127, 2013 참조.

79 泉哲, 「台湾自治制を評す」, 『台湾青年』 1-3, 1920, 13쪽, 15쪽.

80 泉哲, 「植民地の立法機関に就て」, 『台湾』 4-4, 1923, 4쪽.

郎) 타이완총독은 일본정부의 타이완 통치방침은 ‘내지연장주의’에 있다면 서 청원운동은 이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 후에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礼次郎) 수상은 장래 자치 관념 등에 충분한 소양이 쌓이면 참정권을 부여하되 그들의 대표자를 제국 의회로 보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⁸¹ 즉 정부 및 식민 당국은 자치주의가 아닌 ‘내지연장주의’의 입장에 서서 식민지 의회의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한편, 야마모토는 앞서 언급했듯이 타이완의회설치청원서가 처음 제출 되었을 때는 식민지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으나, 점차 이 청원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⁸² 타이완의회설치청원서에 따르면, 타이완에 주민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되는 타이완의회를 설치하여, 타이완의 특수 사정에 기초한 특별 법규 및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마모토는 “입헌국 치하에 있는 신민으로서 타이완 주민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권리의 요구”라고 평가했다. 그는 타이완인 중 불만이 있는 자는 총독부의 전제적 억압정치에 불만이 있는 것이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은”에 감응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니, 타이완의회의 설치를 허용해도 그것을 발판으로 독립을 실현하려는 의도는 없을 것이라며 일부의 우려를 일축했다.⁸³ 그는 같은 글에서 이 운동에 대한 타이완총독부의 탄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야마모토는 제56회 제국의회(1928. 12. 26~1929. 3. 25)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타이완의회설치청원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민족의 해방운동 및 자치자유요구의 요구는 “본능적인 것으로, 도저히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협력해야 할 민족을 오래도록 무자각 상태에 두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는 것과 같고, “문명국민의 치욕”이라

81 浅田喬二, 「1920年代台湾における抗日民族運動の展開過程」, 11쪽.

82 이 청원운동은 위낙에 야마모토의 두 저서 『植民政策研究』, 『植民地問題私見』과 이즈미의 『植民地統治論』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다고 한다(若林正丈, 『台湾抗日運動史研究』, 94쪽).

83 山本美越乃, 「台湾議會設置請願問題と過去の総督政治」, 『外交時報』 41-7, 1925, 143쪽.

고 강한 어조로 힐난했다.⁸⁴ 그는 민정, 풍속, 습관, 제도 등을 달리하는 사정에 비추어 모국의 통치의 근본방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사항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희망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그 운동에 지지를 보냈다.⁸⁵

타이완의회설치청원운동은 야나이하라 다다오도 지지했다.⁸⁶ 그는 자신의 저서 『식민 및 식민정책』에서 타이완의 지방자치가 조선보다 뒤쳐져 있다고 지적하고, 타이완의회설치청원운동이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범위에서의 참정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려를 받지 못하고 범죄시—운동자의 유죄판결—되었다고 서술함으로써 당국의 대응을 예들려 비판했다.⁸⁷ 또 『제국주의하의 대만』(1929)에서는 이 운동에 대해 첫째, 총독 전제정치에 대한 참정권의 요구이며, 둘째, 정부의 동화주의와 내지연장주의에 대해 타이완의 특수성을 주장한 것으로 평가했다.⁸⁸ 야나이하라는 같은 책에서 타이완 통치 30여 년의 치적은 “식민지 경영이 성공한 드문 모범”으로 상찬되고 있지만, 정치 면에서는 주민의 참정권이 여전히 제로인 상태로, 총독 전제(專制)가 극단적이라는 점에서 타이완은 세계 식민지 중에서도 드문 예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타이완인의 ‘정치적 자각’은 이미 점화되었으니 “식민지 통치가 문명적인지 아닌지의 시험은 적당한 시기에 원주자의 참정권을 용인하느냐 마느냐에 달렸다”며 타이완의회 설치의 허용을 촉구했다.⁸⁹

84 山本美越乃, 「異民族の統一糾合と其自覺的運動の調和」, 『外交時報』 49-1, 1929, 83쪽.

85 山本美越乃, 「異民族の統一糾合と其自覺的運動の調和」, 86쪽.

86 야나이하라는 이 청원운동에 청원위원으로 활약한 채배화(蔡培火), 임헌당(林獻堂), 양조가(楊肇嘉) 등과 교류가 있었으며, 그의 첫 번째 일본 식민지 연구서인 『제국주의하의 대만』 집필을 위한 현지조사, 자료수집에 타이완문화협회 인사의 협조가 있었다고 한다(戴國輝, 『日本とアジア』, 新人物往來社, 1973, 79쪽, 86쪽).

87 矢内原忠雄, 『植民及植民政策』, 281~282쪽.

88 矢内原忠雄, 『帝國主義下の台灣』(1929), 『矢内原忠雄全集』 第2卷, 岩波書店, 1963, 380쪽.

89 矢内原忠雄, 『帝國主義下の台灣』, 387~388쪽.

4. 맺음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사조 변화와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3.1운동을 계기로 일본 식민정책학은 종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이게 된다. 우선 식민지 영유의 목적과 관련하여, ‘식민국’ 측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던 것이 ‘식민지’ 측의 이익을 고려한 ‘식민지 본위’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그와 더불어 종전에 제각각이던 식민지 통치방식을 둘러싼 논의도 1920년대가 되면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자치주의를 주장하는 데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게 되었다. 1930년대 후반 이후의 텍스트들이 자치주의가 아닌 프랑스의 동화주의를 수정한 ‘협동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통치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⁹⁰과 비교하면, 자치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확실히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식민정책학의 원론적인 입장은 일본의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에 대한 식민정책론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조선과 타이완에 대해 ‘모국과 식민지의 상호향익주의’ 또는 ‘조선 본위’, ‘타이완 본위’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입을 모아 동화주의를 멈추고 자치주의를 통치방침으로 채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들의 관심은 자연히 두 식민지의 자치제 확대로 향해졌지만, 그 실행에서 허용해야 할 자치의 정도를 두고 편차를 보였다. 대의기관과 관련해서 자치주의자들은 모두 식민지 의회의 설립이 제국의회에 식민지 대표를 참여하게 하는 방식보다 타당하다고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식민지 의회 즉 조선의회, 타이완의회의 설립을 둘러싸고는 그 시기와 지역 타당성에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동화주의에 대한 비판이 반드시 진보를 의미하지 않음은 이미 기존 연구⁹¹에서 지적한 바이지만, 이는 이 시기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자치주의를

90 이에 대해서는 박양신, 「‘대동아공영권’의 건설과 식민정책학」, 『일본연구』 28, 2017, 제3장 참조.

91 小熊英二, 「差別即平等-日本植民地統治思想へのフランス人種社会学の影響」, 『歴史学研究』 662, 1994.

주장한 식민정책학자에게도 적용된다. 아마모토의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자치주의의 주장이 반드시 진보적인 견해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시기 식민정책학자의 자치주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본국과 식민지 간 연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제국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실제로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방식과 거리가 먼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끊임없이 결눈질하고 있었던 것은 영국이 최대의 식민제국이라는 점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닐 것이다. 영국이 코먼웰스(Commonwealth)의 수립으로 식민지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이 지향할 미래라고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